

北 核실험 파장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중단이 핵심 변수

■ ‘조율된 조치’와 포용정책 조정

민간 차원 교류·경협은 그대로 둘 듯 철도·도로연결사업 일시 중단 가능성

정부가 9일 북한의 핵실험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밝힌 이른바 ‘조율된 조치’의 각본이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대북 포용정책을 뒤흔든 핵실험은 조율된 조치의 추진을 촉발시켰고 그 조치를 낳는 첨삭과정은 포용정책의 ‘부분조정’ 과정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조율된 조치와 포용정책 조정은 맞물려 있는 양상이라는 분석이 짙다. 현재 분위기를 보면 정부 내에서 “포용정책의 부분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대전제는 있지만 그 조정 방향이 평화와 번영이라는 지향점을 포 가하는 기초 변경이 아니라 방법론의 수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전략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라기 보다는 전술적이고 기술적인 요소의 재검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율된 조치는 언제쯤=현재 조율은 국내의

적으로 중지를 모으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내적 조율은 노무현 대통령이 10일 가진 여야 지도자 조찬담화와 전직 대통령 오찬간담회 등을 가진 데 이어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단계로 보인다. 국제적으로는 6자 회담국과의 조율과 유엔 차원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도 윤락을 드러낸 데 이어 절충작업이 한창이다. 이런 상황에 비춰 급주 내로 유엔의 대북 결의안이 나오면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 과정을 거치고 국내 여론까지 감안한 뒤 조율된 조치가 조금씩 구체화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이다. 하지만 대북 지원의 지속 여부를 놓고 핵실험 당일에는 강경 기류 일색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국내에서 신중론도 고개를 들고 있는 만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가이드라인 나올까=정부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세부조치를 내놓을지도 관심거리다. 포용정책의 부분조정이라는 입장까지 나온 마당에 사례별 접근방법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예상 가능한 접근법으로는 우선 민간 분리론을 들 수 있다. 이는 민간 차원의 교류와 경협은 그대로 놔두지만 당국 주도로 추진하는 경협사업에 메스를 들이대거나 핵실험의 출구가 보일 때까지 일시 중단한다는 것이다. 이를 3대 경협사업에 적용할 경우 당국이 추진하는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일시 중단이 불가피하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에는 큰 지장이 없게 된다. 여기에 속도조절론, 나아가 현상유지론도 맞물리고 있다. 화해 협력의 확대 및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남북 협력사업의 분야를 늘리고 규모도 키우던 종전 입장을 바꿔 현상 유지에 국한한다는 얘기다. 이 경우 협력의 ‘확대’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중단된다. 예컨대 남북관계 경색으로 지난 7월부터 진전이 없는 사안인기는 하지만 경공업·광업 협력이나 농업, 임업, 수산업 협력은 당분간 멈춰서게 된다. 또 개성공단의 경우 추가분양 중단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각론은 어떻게 될까=조율된 조치에는 최대 관심사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도 검토 대상으로 올라 있다. 그러나 현재 유엔의 논의 흐



미국 워싱턴의 핵 감시기구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SIS)는 10일 북한의 핵실험 장소로 추정되는 함경북도 길주 부근의 위성사진을 입수,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촬영은 핵실험 전인 지난달 17일 이뤄졌다. /연합뉴스

름에 비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사업까지 직접적으로 건드릴 필요는 없다는 논리가 힘을 받고 있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이나 금강산 관광객의 여행 취소로 이미 시장에 의한 ‘심리적 제재’를 받고 있는 만큼 별도의 조치가 없더라도 사업의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거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국이 유엔 결의안의 포괄적 적용을 모색할 경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도 제재 논란에 휩싸일 공산이 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北이 말하는 안보위협은 과장”

노무현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북한이 핵을 가지려는 이유가 자신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북한이 말하는 안보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대단히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민주평통 자문위원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알고 안보위협을 과장하는 것이지, 실제 잘 몰라서 진짜 위협이 있다고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정확히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단히 과장돼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북한은 진정한 의미

에서 평화, 안전을 바란다면 무장력도 필요하겠지만 평화의 질서를 구축해야 하고, 주변국가와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나친 무장력은 평화의 질서를 해치고 주변국의 신뢰를 해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모두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정권이 이 같은 이치를 잘 이해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북한이 무장력만으로 안보를 말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평화적 행동, 신뢰 있는 행동을 통해 스스로의 안보를 기해 나가는 방향으로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완상 “일시적 대북지원 중단 불가피”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11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일시적 대북지원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 총재는 이날 “대북 수혜지원 물자 가운데 시멘트는 민감한 품목으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자신이 선택한 핵실험 결과에 대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9일 북한의 핵실험 강행 직후 동해항과 울산항에서 이뤄지던 시멘트, 쌀 등 대북 수혜물자 지원물자 선적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한 총재는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사려깊지 못한 선택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가장 미워하는 세력을 도와주고 자신의 고립을 심화시키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이번 핵실험은 강경 군부가 주도한 것으로, 군부가 (내외 정책) 좌지우지하는 한 경제개혁이 어렵다”면서도 군부가 핵실험을 결정한 원인은 대북 포용정책이 아니라 미국 내 강경파의 대북 압박에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북·미 대화·민간 지속 교류해야”

광주·전남 시민단체 촉구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들은 11일 북 핵실험 파장과 관련, 북미 직접 대화와 남북정상회담, 민간 차원의 지속적인 교류를 촉구했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전남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일체의 제재를 중단하고 북미간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북지원민간단체인 광주·전남 우

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도 성명을 내고 “북핵실험에 따라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은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도 이날 논평에서 “북미 직접 대화와 남북정상회담만이 민족이 살 길”이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또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개성공단·금강산관광사업은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포용정책 대통령 “어렵다” 한총리 “수정” 김근태 “그대로”

■ 말로만 ‘초당 대처’... 북핵대응 혼선

PSI참여 정부·한나라 “찬성” 우리당 “반대”

북한 핵실험 직후 초당 대처라는 대의명분에 공감대를 이룬 정치권이 점차 앞으로 취해야 할 대응 기초를 놓고는 서로 다른 처방전을 내놓고 있어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대북 포용정책=국민의 정부 이래 8년여를 이어져 온 대북정책의 대전환이나, 부분수정이나, 현상고수나를 놓고 그야말로 당·정·청의 주장이 ‘진실게임’하듯 혼란스럽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포용정책의 포기 내지 부분수정 가능성이 공론화된 계기는 노무현 대통령의 9일 기자회견 석상에서다. 노 대통령이 “정부도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한 것.

이에 한명숙 총리는 지난 10일 국회 긴급현안 질문 답변에서 “지금 시점에서 대북 포용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에서는 김근태 의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지금도 평화번영정책을 폐기할 때가 아니다”면서 포용정책 기초 유지와 대화를 통한 핵위기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PSI 참여=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할 것인지를 놓고도 정부와 여당의 입장차가 확인하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참여 쪽에 기운듯한 정부 입장을 적극 거드는 형국이다. 우선 유명한 외교부 제1차관은

“PSI에 부분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사안별)로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아예적으로 외교당국자들의 발언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우리 정부의 PSI 참여는 안된다”고 서둘러 차단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PSI에 전면 동참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교류협력 사업=한 총리가 전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사업의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열린우리당은 교류협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 역시 당정의 시각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교류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평화라인”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외교통상부 북핵 태스크포스 회의가 11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유명한 외교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란=대량살상무기 재료와 부품 등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70여개 회원국들이 정기적으로 정보교환 및 훈련을 실시하고 영해상에서 수송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정부는 현재 읍서버 자격으로 간접 참여하고 있을 뿐, 전면 참여는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가정의 건강을 위한
세심함 속에는 신우 환기유니트
Airpass 있습니다

신우환기유니트
신우환기유니트
신우환기유니트

중국어 출장강의

중국어 시험학교
리튬자이나 中国語学院

중국어 시험학교
리튬자이나 中国語学院

중국어 시험학교
리튬자이나 中国語学院